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4. 5

통일정세분석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4. 5

김규륜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및 목적	1
II.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내용	3
III.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 및 성과	10
IV.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분석	13
V. 정책적 고려사항	18
부록	
1.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25
2. Joint Fact Sheet :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 A Global Partnership	38
3.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주요내용	55

I.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 회담 이후 두 번째로 2014년 4월 25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함.
 - 2014년 3월 23일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네덜란드 헤이 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총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섯다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EAS 정상회의 취소로 연기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재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정을 포함함.
 - 당초 아시아 순방국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 등 대일 외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문 일정을 조정함.
 -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지속적인 증가, 한일관계의 특수성 등 대일 외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미국이 요청을 수락해 한국 방문 일정이 추가됨.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재집권 이후 첫 아시아 방문이라는 점에서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대한 구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음.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중동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집중에 따른 아시아 우방국들의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순방임.

-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우방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특히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경제’와 ‘안보’라는 2개의 축이 연결되어 있는 정책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목적이며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3각 안보동맹 및 연대의 강화가 목적임.
- 2014년은 동북아 주변 4국과 남북한의 권력교체 이후 진행된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국제정세에 투영되는 해이므로 향후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규정짓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는 금번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한국의 향후 대외 정책 및 대북정책 관련 정책적 고려사항을 북한의 반응 분석과 함께 제시하고자 함.

II.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내용

-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시작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제안함.
 -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힘든 과정을 극복했듯이 한국 국민들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언급함.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공고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양 국민의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경제·사회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함.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현황과 주요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강력하고 역량 있는 동맹>

-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
 -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역내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제고
 -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014년 내에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변함없이 확고히 함.

-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
 -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및 키리졸브/독수리 훈련(KR/FE)과 같은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및 준비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

- 한미동맹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주요 정보·감시·정찰(ISR) 및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

-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의 비
준을 환영
 -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 이 협정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을 반영하는 것으
로,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ipin)으로서의 역할
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한미동맹은 점점 더 범세계적인 특성을 가져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안보, 개발, 경제 이니셔티브에 있어 동반자로서 협력
하고 있음.
 - 한미 양국 간 협력의 확대는 동북아시아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
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
 - 한미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긴밀히 협력
 -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사
용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완전하
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제공
 - 한미 양국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 한미 양국은 범세계적으로 해적퇴치를 위해 노력

- 한미 양국은 핵안보, 핵안전조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기술 확산 저지, 핵테러 방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확산 및 확산대응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협력 유지
 - 국제사회의 핵테러 방지,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긴밀하게 협력
 -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지원국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에서도 적극 협력

<기후변화와 에너지협력>

-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가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 공유
 -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였으며, 양국은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
 - 한미 양국은 주요경제국 포럼(MEF)과 기후·청정공기 연합(CCAC)에서도 협력
- 기후변화 과학 및 청정에너지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
 -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의 개최 및 세일 가스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

<국제 개발협력 촉진>

-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의 모자(母子)보건 협력 강화, 파워 아프리카 사업(PA)과 연계

된 가나에서의 전력 개발 사업 협력,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 분야 협력, 그랜드 챌린지(GCD) 및 민관 파트너십(PPP)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014년 4월에 체결함.

- 미국 국제개발처는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한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7만 달러에 달하는 기여금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시 위기 평가, 긴급 사태 대책 수립, 인도주의적 기준 적용 등의 분야에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음.
 - 한미 간 협력관계가 국가 차원의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필리핀 태풍 하이옌 발생시 조율된 대응 등에 대한 협력 사례 존재

<번영, 혁신,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한 동반자 관계 형성>

- 한미 FTA 협정은 양국의 소비자, 기업, 근로자,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음.
 -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함.
-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함.
- 지난 2013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에서, 양측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터넷의 범세계적·개방적 특성을 배양하는 ICT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결정

- 한미 양국은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
- 한미 양국은 국제 금융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 안정성 강화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촉진 정책들에 대해 G20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긴밀히 공조

<과학, 기술, 사이버, 보건 분야 협력>

- 한미 양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
 - 한미 양국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양국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유지 및 확고한 비확산 의지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 중임.
-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학연구, 기술개발이 경제적 번영, 공중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함.
 - 과학기술분야의 아이디어, 정보, 기술과 기법의 소중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할 계획
- 한미 양국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간 협력 증대와 군 당국간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
 -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

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 여름 제3차 한미 사
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

-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보건후생부(HHS)는 특히 기초과학과 공중
보건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협업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 미국은 세계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전지
구적 보건안보를 국제 안보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자 하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환영

<양국 국민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 한미 양국 국민 간에는 폭넓고 깊은 유대 관계 유지
 - 미국에는 170만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으며, 미국을 방문하
는 외국인 중 한국인 수는 아홉번째로 많음.
 - 매년 7만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데, 이
는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미국은 한국에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를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
- 지난 2013년 10월 29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학부 졸업생들
이 어학연수, 인턴 경험,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의 기한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Ⅲ.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 및 성과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지님.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 관계 공동설명서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축'과 같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이며 범세계적인 동반자 관계로 한미동맹이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 오바마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된 대한제국과 조선 왕실의 인장 9점을 반환함으로써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의를 가짐.
 -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을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 마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한미 양국 정상은 예비협의를 노력 강화 등 경제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 도출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지속적인 예비협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충실한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원산지 증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됨.

-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라는 공통의 안보적 이해 공유를 통해 향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비 가능
 - 한미 두 정상은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합

계 방문했으며,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 현황을 직접 보고 받음.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하는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향후 한반도의 평화유지 기반으로 작용 가능
 -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하여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는 한미 MD의 효율적인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성과가 있음.
 -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 치밀한 고려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중한 협상자세와 안보태세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북한 핵문제 관련 긴밀한 대북공조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 증진에 기여 확인
-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한미 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도발 중단을 요구함.
 - 오바마 대통령은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우리는 동맹들과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문제를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terrible and 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언급하여 일본 정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관련 갈등에서 한국의 입장에 공감을 표현함.
 -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간 갈등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회담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한일문제에 대한 미국측 시각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한미일 3각 협력의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되, 일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한 양자 차원의 외교는 계속할 필요가 있음.

IV.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분석

- 한미 정상회담은 1952년 12월 2~5일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방한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까지 총 58차례 개최되었음.
 -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와 3차례, 케네디(John F. Kennedy)와 1차례, 존슨(Lyndon B. Johnson)과 3차례, 닉슨(Richard M. Nixon)과 1차례, 포드(Gerald R. Ford)와 1차례, 카터(James Carter)와 1차례, 레이건(Ronald Reagan)과 4차례, 부시(George H. W. Bush)와 6차례, 클린턴(William J. Clinton)과 14차례, 부시(George W. Bush)와 15차례, 오바마(Barack Obama)와 9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함.
 - 역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 발전됨.

- 본 장에서는 최근 5년간 한미관계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총 9차례 양자 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
 -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7차례, 박근혜 대통령과는 2차례 공식적인 정상회담 진행
 -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2013. 9. 5~6)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식적 만남은 제외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됨.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조를 확인하였고, 북핵 6자회담의 진전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 2009년 6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함.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핵심내용은 한미 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음.
-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하고 역량 있는 동맹’의 기조 속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기초가 됨.

○ 2009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6월에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여 핵우산 및 확장 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하였고,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공유함.

- 한미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2010년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파견과 대테러 등 범세계적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함.

○ 2010년 6월 26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여 연기하기로 조정 합의함. 또한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양국 정상이 공감하여 조속한 체결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2010년 11월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공유함.
- 2011년 10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전날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으로 한미동맹이 기존 군사·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화하기로 합의함.
 - 한미 FTA로 인해 양국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고, 양국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며 경제 파트너십이 증진되어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2011년 신설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북한 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공조·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빈곤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2012년 3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에 대해 UN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및 중국 측에 대북 압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함.
 - 미사일 발사 시 대북 영양지원 패키지를 철회할 방침을 분명히 하였고,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추가적인 고립 및 제재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함.
 -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함.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2013년 5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함.
 -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대북정책 관련하여 단호한 원칙론적 입장 등을 선언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최근 일련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발전된 국력을 반영하여 한미관계를 지속적으로 격상 및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부시 행정부 시절에 간헐적으로 표출된 다소 불편했던 한미관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긴밀한 협조과정을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 한미관계를 이룩하도록 합의하였음.

-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한미관계 발전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며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에도 기여함.
 - 한미관계의 부분적 불협화음 표출은 민주국가간 관계에서는 자주 있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에게는 오관을 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관계의 역사적 사건들이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공고한 한미관계의 유지는 한반도 안정에 필수적임.

V. 정책적 고려사항

1. 북한의 반응과 전망

- 북한은 2014년 4월 2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 발표함.
 -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로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난함.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는 “애당초 일정에도 없었던 상전을 끌어오기 위해 상갱이질까지 하면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며 갖은 추태”라고 막말을 사용하여 비난함.
 - 또한 “망발은 우리와 온 민족의 충고와 경종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북남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며 위협 발언함.

- 북한은 2014년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상호비방 중지를 제안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욕설을 사용하여 맹비난하고, “북남관계에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함.
 - 드레스덴 구상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일환이라 비난함.

- 4월 27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서는 “오바마의 남조선
행각 결과는 백년속적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핵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전밖에 없다”고 표현함.
 - ‘전면핵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4월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더욱 첨예한 대결과 핵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게 될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 않는
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하면서 핵실험에 대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권리행사”라고 주장함.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4년 5월 3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
해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함.
 - 대변인 담화에서는 “남조선을 북한의 군사적 식민지로 영구히 내맡기
고 상전의 대아시아전략과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 하수인으로서 더
충실히 복무해나가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 “민족의 존엄과 자
존심도 다 쥐버린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비난함.
 - 북한은 전작권 재연기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
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같은 북한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집된 노력을 나타내는
6자회담 재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후에 핵실험 강행 의도를 공개적으로 재차 밝힘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북한의 강경한 태도 표명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차원의 위협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세력 간 알력과 국내적 불안정을 김정은 측근세력들이 대외관계에서의 긴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독재정권의 전형적 전술 구사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남북관계 개선의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한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북한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임.

2. 정책적 고려사항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대북정책 기조 근간>

- 한미동맹 강화 및 정책 공조 유지를 통한 일관된 대북정책 견지 필요
 - 긴밀한 한미공조와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 방안 마련
 -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 체제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통해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견지

-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발전과 한중관계 발전을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미중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함.
- 공고한 한미동맹은 북한 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향후 다가오게 될 통일시대의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심하여야 함.

<국제적 차원 통일준비 노력의 체계적 추진>

- 한반도 평화·변영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외교적 노력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국제적 지지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 강구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우호적인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
 - 한반도 주변국의 공통된 이익과 입장 차이를 분석하여 향후 국제적으로 협력적인 통일환경 조성 방안 도모 필요
 - 우호적이고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동북아 지역 평화협력체제 구축 촉진 필요
- 통일의 부담감 및 한반도 리스크 해소 필요
 -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통일이 가져다 줄 다양한 효과와 가치에 대한 정부의 통일정책 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필요
 -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성 발언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와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확고한 한미동맹 지속 필요

-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의 운용능력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검증을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다자협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양자관계 보완 발전>

- 한국이 중견국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자외교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요국과의 양자외교에 덧붙여 다자무대에서도 선도적 역할이 긴요함.
- 한국은 아시아 지역 내 현존하는 각종 다자협력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의 부당성과 북한 주민의 복리를 외면한 독재정치의 폭압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다자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양자외교의 유용성도 점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자외교와 양자외교를 조화시켜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함.

<남북관계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국제화 정책요소 적극 활용>

-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 정착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남북관계가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판단됨.

- 국제적 기준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개성공단 국제화 및 남북중·남북러 등 3각협력과 국제기구 경우 대북지원 등의 사안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보다 넓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한러협력에 의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과 한중협력 모델 발굴 등을 통한 북한의 참여 고려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상 국제사회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적 환경 조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가 글로벌한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비전통적 안보 이슈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발전 모색>

-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한국의 역할 위상 제고에 따른 통일외교 정책 마련
 - 한미동맹의 영역을 넓혀 비전통안보 사안인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개발, 인도적 지원, 인권, 테러 대책, 해적 퇴치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한국의 대외정책이 북한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경화된 안보적 관점 위주로 추진될 경우, 한국의 외교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연성이슈와 연관된 협력의 기제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다양한 국제적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성협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부록 1.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2014. 4. 25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맞아 바라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할 것입니다. 61년 전 한·미 양국 국민들의 공동의 희생 속에서 일궈낸 우리의 동맹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 되었으며, 더욱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랜 기간 강력한 안보, 경제 및 인적 유대 관계를 향유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는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 강화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및 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력하고 역량 있는 동맹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역내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014년 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및 키리졸브/독수리 훈련(KR/FE)과 같

은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및 준비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동맹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주요 정보·감시·정찰(ISR) 및 무기 체계를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3월 24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체계 및 F-35기 확보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양국 정부는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이면서 상호운용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중이며, 동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측의 비준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 작업을 토대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

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10월 맞춤형억제전략을 승인 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3년 3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Counter Provocation Plan)에 서명하였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한·미 동맹은 점점 더 범세계적인 특성을 가져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안보, 개발, 경제 이니셔티브에 있어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간 협력의 확대는 동북아시아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P5+1의 이란 협상 프로세스 및 P5+1과 이란 간에 합의된 공동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미국은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한·미 양국은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 계속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시리아 국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문제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합동사찰단 활동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 세계 화학무기 비축분을 완전

하게 제거한다는 목표를 강력히 지지하며,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 협약(CWC) 미가입국들이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미 양국 군대는 함께 활동해 왔으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관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3년 5월 제3차 아세안 지역포럼 재난 구호 훈련(ARF DiREx)을 태국과 함께 공동 주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은 핵안보, 핵안전조치,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기술 확산 저지, 핵 테러 방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확산 및 확산대응 문제에 있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물질이 판매되거나 도난되어 핵무기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범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간 해상무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군 자산을 제공해 왔으며,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은 2012년 서울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금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현 의장국 3개국은 ‘핵안보 이행 강화’ 공동선언문 발표를 주도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35개국은 자국 핵안보 시스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미 양국은 다른 3개국과 함께,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LEU) 핵연료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5월 동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핵테러 방지,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지원국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협력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가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야심찬 행동을 함께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주요경제국 포럼(MEF)과 기후·청정공기 연합(CCAC)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정례 협의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미국의 국무부 기후변화특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기후변화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G-20 세인트피터스버그 정상 커뮤니케에 제시된 것처럼,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상의 전문기술과 제도를 활용하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과학 및 청정에너지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저장, 연료 전지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6월 서울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셰일 가스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한국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독려,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위급 다자포럼인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 개발협력 촉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은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의 모자(母子)보건 협력 강화, △‘파워 아프리카 사업(PA)’과 연계된 가나에서의 전력 개발 사업 협력,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 분야 협력,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GCD)’ 및 민관 파트너십(PPP)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014년 4월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USAID는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한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7만 불에 달하는 기여금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시 위기 평가, 긴급 사태 대책 수립, 인도주의적 기준 적용 등 분야에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국가 차원의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필리핀 태풍 하이옌 발생시 조율된 대응 등, 우리는 이러한 협력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들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번영, 혁신,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한 동반자 관계 형성

한·미 FTA는 2014년 3월 15일 발효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발효 3년차가 된 이 기념비적인 협정은 양국의 소비자, 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타이어는 테네시주에 8억불을 투자하여 첫 번째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공장은 1,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대, 삼성, 기아, LG, SK, 한진해운 또한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한국의 대미투자는 미국의 대한투자보다 44억불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GE, 보잉, 에어프로덕츠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창의성과 독창성이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양측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터넷의 범세계적·개방적 특성을 배양하는 ICT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제 금융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 안정성 강화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촉진 정책들에 대해 G20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6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는 미국으로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였습니다. FSIS는 현재 이행중인 한국의 가금류 관련 법령과 검사체계가 미국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판정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삼계탕과 같은 제품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 사이버, 보건 분야 협력

한·미 양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으로

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양국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를 유지함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물론, 확고한 비확산 의지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양국은 동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이 한·미간 원자력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학연구, 기술개발이 경제적 번영, 공중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보건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금년 5월 19일~20일간 워싱턴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양국간 과학기술분야의 아이디어, 정보, 기술과 기법의 소중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미간 사이버 분야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13년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개최를 환영하였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한·미 양국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간 협력 증대와 군당국간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금년 여름 제3차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계속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보건후생부(HHS)는 특히 기초과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협업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전 지구적 보건안보를 국제 안보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후생부 대비·대응 차관보실은 한국의 공중 보건 응급상황 대비·대응 분야 전문인력을 초청해 왔습니다. 2013년,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미국의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공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16명의 한국 박사후과정 연구원에게 미 국립보건원에서 2년간 연구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기관간 연례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생물학적 안보, 생물학적 감시, 그리고 생물학적 방위 등의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한·미 양국 국민 간에는 폭넓고 깊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170만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으며, 이 중에는 Sung Kim 현 주한 미국대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 수는 아홉번째로 많습니다. 매년 7만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는데, 이는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유학중인 미국인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제국 국새 1점을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재 9점 반환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한국 문화재청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학부 졸업생들이 어학연수, 인턴 경험,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의 기한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천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한국내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 청소년들은 미국 어학 연수를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기법과 국제 경험을 쌓게 됨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950년 최초 설립 이래 「폴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은 한·미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왔으며, 1992년부터는 「폴브라이트 영어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00명이 넘는 미국인 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영어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폴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출신 동문을 포함, 약 6천명에 달하는 미국 정부 교환 프로그램 출신 동문들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에서 여성의 충분한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미국은 2014년 6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할 예정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한국인 5명을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회의는

기업인, 경제학자, 노동계 대표, 정책입안자, 여권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여러 정책입안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조금 더 가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6명의 탈북 고등학생들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주최하는 2개의 'SportsUnited' 농구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이제는 한국 국민이 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은 2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농구를 하고 영양 섭취, 체력 단련, 자기계발, 갈등 해소 등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스포츠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은 샘 카스(Sam Kass) 백악관 부주방장 겸 영양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미국 청소년 건강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스 부주방장은 방한 기간중 자신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외빈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는 한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식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록 2. Joint Fact Sheet :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 A Global Partnership

April 25, 2014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Obama’s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stronger and deeper than ever. Originally forged in the shared sacrifice of our peoples 61 years ago, our Alliance today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n increasingly comprehensive global partnership. Our two nations enjoy strong and longstanding security, economic, and people-to-people ties, and our shared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re the foundation of our relationship. From strengthe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o climate change, we are committed to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global challenges, and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advance prosperity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remain fully committed to continuing our close cooperation on the full range of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toward our common goal, which is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a peaceful manner. Our two countries reaffirm the UN Security Council’s unanimous

condemnation of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s clear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and 2094.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additional provocations in further violatio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e are also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e full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the DPRK, and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threatening actions. The United States supports President Park's vision of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free from the fear of war, and peacefully reunified on the basis of democratic and free-market principles, as articulated in her Dresden address.

We are dedicated to working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ocus international attention on and improve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systematic and ongoing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its people.

A Strong, Capable Alliance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ROK) continue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We are strengthening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As part of this effort to enhance our coordination, we plan to hold a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2+2") meeting in 2014. The U.S.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s security remains unwavering.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have decided that due to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including the endur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the current timelin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a Republic of Korea-led defense in 2015 can be reconsidered. Both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develop interoperability and readiness through the use of annual joint and combined exercises such as Ulchi Freedom Guardian, Key Resolve, and Foal Eagle. The two sides are also working to ensur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ready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after OPCON transition takes place. The leaders of both countries urged their teams to continue to work hard to determine appropriate timing and conditions.

As part of its commitment to strengthen Alliance cap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continuing to procure majo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and weapons systems.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on March 24 that it intends to procure Global Hawk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s, and announced its intent to procure F-35 Joint Strike Fighter jets.

Furthermore, the two governments exchanged views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regarding the anticipated U.S. Air Force T-X trainer replacement program.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developing its own interoperable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s and enhancing the interoperability of the Alliance's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C4I) systems. In order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a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response against such threats.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ratification of a new five-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establishes the framework for ROK contributions to offset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greement reflects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trengthens the U.S.-ROK Alliance's capability to serve as the linchpin of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Following our work in the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our two countries endorsed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in October 2013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xtende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eats. Both countries signed the Counter Provocation

Plan in March 2013 to enable us to respond immediately and decisively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Global Partnership for Peace and Security

The U.S.-ROK alliance is increasingly global in nature, and our countries are partners on a broad range of security, development, and economic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Our expanding cooperation benefits not only Northeast Asia, but also promotes peace and secur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re close partners o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cerns about Iran's nuclear program. Our countries strongly support the P5+1 process and the P5+1-Iran Joint Plan of Action.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the Republic of Korea's assistance in implementing the Joint Plan of Acti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condemn the Syrian regime's indiscriminate and continuing use of violence against civilians. Both countries are committed to addressing the significant humanitarian needs of the Syrian people,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itarian assistance efforts. We are close partners in supporting the UN-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Joint Mission and remain committed to ensuring the complete elimination of Syria's chemical weapons. Our two countries strongly support the goal of the complete elimination of chemical weapons stockpiles around the world, and urge those countries that have not acceded to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including North Korea,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In Afghanistan, where American and Korean troops have served side by side,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provide generous assistance toward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operate closely 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co-hosting of the 3rd ASEAN Regional Forum Disaster Relief Exercise with Thailand in May 2013.

Our two countries continue to collaborate on a wide range of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issues, including nuclear security, nuclear safeguards, comba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lated technologies, and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have long partnered to ensure that nuclear materials cannot be sold or stolen and then used for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re partners in the global counter-piracy effort. Both countries have contributed naval

assets to protect the safety of civilian maritime trade and are active leaders in the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The United States convened the first Nuclear Security Summit in Washington, DC in 2010, and the Republic of Korea hosted the second Summit in Seoul in 2012. At this year's Summit in The Hague, the three Summit hosts sponsored a 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Implementation, issued by 35 countries, who committed to take certain ac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ir nuclear security systems and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nuclear security.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three other countries, announced they are collaborating to develop new high-density low-enriched uranium fuels as part of an effort to minimize the amount of highly-enriched uranium in civilian use. Our two countries are closely cooperating to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2004), including through joint efforts to lead a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in May 2014,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soluti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re also close partners on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 multilateral partnership that strengthens our global capacity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nuclear terrorism. We also collaborate in the Global Partnership Against the Spread of Weapons and Materials of Mass

Destruction, an initiative to prevent terrorists or states that support them from acquiring or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limate Change and Energy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share the view that climate change represents a threat to the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all nations, and we are committed to taking ambitious action together. The Republic of Korea hosts the Green Climate Fund (GCF), and we cooperate in the Major Economies Forum and the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Both countries intend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ward the successful operationalization of the GCF. As part of our regular consultations on this issue, the Department of State's Special Envoy for Climate Change hosted his ROK counterpart for a bilateral dialogue on climate change in January 2014.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reaffirm their commitment on using expertise and the institutions of the Montreal Protocol to phase dow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ydrofluorocarbons (HFCs) as set out in the G-20 St. Petersburg Leader's Communique.

Our countries also collaborate closely on climate change science and clean energy research.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ns to host a Clean Energy Policy Dialogue with the U.S. Department of Energy in June to discuss

cooperation on clean energy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ing microgrids, energy storage, and fuel cell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discuss possibilities for promoting information sharing regarding shale gas.

In May, the Republic of Korea is hosting and the U.S. Secretary of Energy plans to attend the 5th Clean Energy Ministerial, a high-level global forum to share best practices and promote policies and programs that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global clean energy economy.

Advanc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 April 2014 that highlights our strengthened collaboration on maternal and child health in Ghana and Ethiopia, our cooperation on developing the energy sector in Ghana in support of the Power Africa Initiative, our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in Vietnam, and our partnership on innovative approaches such as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dditionally, USAID, in partnership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s providing nearly \$270,000 to

strengthen the ROK's disaster response capacity by supporting civil society partners in the areas of assessments, contingency planning, and application of humanitarian standards in disaster response. This partnership is expected to enhance the capacity of national-level disaster and emergency first responders. Our two countries have already seen benefits from this collaboration, particularly during our coordinated response to Typhoon Haiyan in the Philippines.

Partnering for Prosper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marked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on March 15, 2014. Now in its third year, this landmark agreement continues to provide tangible benefits for consumers, businesses, workers, and farmers in both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hav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strengthen our efforts to fully implement the KORUS FTA to ensure that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agreement are realized for both sides.

The KORUS FTA has provided a strong foundation for increase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by Korean companies. In October 2013, Hankook Tire Co. announced it would build its first manufacturing plant in Tennessee, investing \$800 million and

creating 1,800 jobs in the process. Hyundai, Samsung, Kia, LG, SK, and Hanjin Shipping also have made major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In 2012 and 2013, the United States had a \$4.4 billion surplu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lso welcomes the recent investments made by U.S. companies such as GE, Boeing, and Air Products and Chemicals, Inc. and is hopeful that the KORUS FTA will expand opportunities for more investments by U.S. companies.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that it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interest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its commitment to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meeting the high standards of the TPP and to address specific issues of concer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share the view that creativity and ingenuity are keys to enhancing our shared prosperity and build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During the first U.S.-ROK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olicy Forum in November 2013, both sides decided to pursue collaboration on ICT policy that promotes innovation and fosters the global and open nature of the Internet.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look forward to further cooperation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the second round of the U.S.-ROK ICT Policy Forum in Seoul in the second half of 2014.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so work closely together to monitor global financial condition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cluding through the G-20, on policies that strengthen financial stability and promote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On March 26, 2014,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added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list of countries eligible to export poultry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FSIS determined that the Republic of Korea's poultry laws, regulations, and inspection system, as implemented, met U.S. standards. This decision allows U.S. consumers to enjoy products such as samgyetang (ginseng chicken soup) imported from the ROK.

Collaboration on Science, Technology, Cyber, and Health Issue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have had a strong partnership in the field of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and the United States is pleas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nations in the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technology. To advance this collaboratio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re negotiating a successor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is intended to reflect the Republic of Korea's status as a major global nuclear supplier and the great importance both governments place on

maintaining high standards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upon which we are continuously improving, as well as a strong commitment to nonproliferation. Our two countries are confident that a new agreement can greatly advance our bilateral cooperation and address the Republic of Korea's civil nuclear energy priorities of assured fuel supply, used fuel management, and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market.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enjoy longstanding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reflecting the two nations' mutual recognition that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education,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re essential to economic prosperity, enhanced public heal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national security. We look forward to holding the next Joint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May 19-20 in Washington to expand collaboration on a wide range of science, technology, and health issues. We plan to revise the U.S.-ROK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to enhance the valuable exch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ideas, information, skills, and techniques between our two countries.

U.S.-ROK cooperation on cyber issues continues to expand,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d Seoul's hosting of the October 2013 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In 2013,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continued our efforts to enhance cybersecurity through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our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 as well as the creation of a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between our militaries.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plan to hold the third round of the U.S.-ROK Cyber Dialogue in the summer of 2014, and will continue to promote a common vision of an open, interoperable, secure, and reliable cyberspace.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nd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inue to work cooperatively to improve the health of Republic of Korea and U.S. citizens, particularly through our research collaboration in basic science and public health, and our cooperation on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for the U.S.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which seeks to accelerate progress toward a world safe and secure from infectious disease threats and to promote global health security as an international security priority.

As a part of this cooperation,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HH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hosted Republic of Korea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fellows. In 2013, the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and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reated a joint fellowship program and offered 16 Korean post-doctoral researchers two-year stipends for research at NIH.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lso continue to partner on areas such as biosecurity, biosurveillance, and biodefense through the annual interagency Able Response exercise.

Enduring Ties Between Our Peoples

Our people-to-people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e broad and deep. Over 1.7 million U.S. citizens are of Korean descent, including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Sung Kim, and Republic of Korea citizens are the ninth-largest nationality of visitors to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sends over 70,000 students annually – more students per capita than any other major country – while the number of U.S. citizens stud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grow.

Recognizing the importance both countries place on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the United States is pleased to return to the Republic of Korea 9 cultural artifacts, including one national seal of the Korean Empire. The repatriation of the nine artifacts was conducted b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n October 29, 2013, our two countrie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newing the Work, English Study, Travel

(WEST) program, which allows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to study English, work as interns, and travel in the United States. Over 2,000 Korean youth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ince its inception. Since 2011, the WEST program also has given North Korea-born youth now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English language ability and gain business skills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to help them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Korean community.

Since 1950, the Fulbright program has fostere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and since 1992 over 1,100 U.S.-citizen college graduates have spent a year or more as teachers in rural reg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art of the Fulbright English Teaching Assistant program. Including Fulbright program alumni, there are nearly 6,000 U.S. government exchange program alumni in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ing that expanding economic opportunities for women and ensuring their full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is a challenge shared by both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pleased to announce its intent to invite five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to attend the White House Summit on Working Families, which President Obama plans to host on June 23, 2014. The Summit aims to bring together businesses, economists, labor leaders, policymakers,

advocates, and ordinary citizens to discuss how we can create a 21st century workplace that meets the needs of a 21st century workforce. Following the Summit, the participants plan to meet with policymakers and businesspeople to discuss how to make workplaces better for families, with an eye towards improving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2014, six North Korea-born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wo separate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SportsUnited basketball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ree boys and three girls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are now ROK citizens spent two weeks in the United States playing basketball and learning about nutrition, fitness, life skills, conflict resolution, and how sports help to build bridges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is pleased to announce that White House Assistant Chef and Senior Policy Advisor for Nutrition Policy Sam Kass plans to travel to the Republic of Korea in summer 2014 to share First Lady Michelle Obama's work to help the United States raise a healthier generation of young people. In addition to sharing his experience cooking at the White House for President Obama and foreign dignitaries, Chef Kass looks forward to learning about and sampling the rich diversity of Korean cuisine.

부록 3.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주요내용

일자	정상회담	장소	주요내용
2009.4.2	이명박-오바마	런던 (G20 정상회의)	- 북한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UN안보리 1718호 위반 확인 - 미사일 발사 시 UN안보리 회부 및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의지 재확인
2009.6.16	이명박-오바마	워싱턴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채택
2009.11.19	이명박-오바마	서울	- 북핵문제 관련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 공유 - 2010년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협의 개최 추진 - 한미 FTA 체결 진전 노력
2010.6.26	이명박-오바마	토론토 (G20 정상회의)	- 전작권 연기(2015.12.1까지) -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 진행
2010.11.11	이명박-오바마	서울 (G20 정상회의)	-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양국 통상장관 조속히 협상 합의
2011.10.13	이명박-오바마	워싱턴	-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환영 -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활성화
2012.3.25	이명박-오바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북한 위성발사 시 추가 제재 -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강화
2013.5.7	박근혜-오바마	워싱턴	-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발표
2014.4.25	박근혜-오바마	서울	-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발표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4-03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2527 팩스 : 02-901-2543
인쇄처	(주)예원기획 전화 : 02-745-8090
인쇄일	2014년 5월
발행일	2014년 5월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